

박찬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요약)

2024. 9. 4. 수.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협에 처했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세수펄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펄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 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삼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료대란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
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 소멸하는 대한민국

세계 주요국가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
합니다.

■ ‘함글함울’의 정치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2024. 9. 4. 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